

“이상돈 의장 교체” vs “安 인정 못해”... 파국 치닫는 국민의당

내달 4일 전대 결정에 갈등 최고조...찬성과 오늘 당무위 반대파 “불법 전대 강력 저지...개혁신당 창당추진위 구성”

지난 12일 통합반대파의 격렬한 반발을 누르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최종 결정짓는 '2·4 전당대회'를 확정지은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는 휴일인 14일에도 '2·4 전대' 관철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15일 당무위를 재소집해 통합반대파와 뜻을 같이하며 전대 개최에 거부감을 표시해온 이상돈 전대 의장 교체 등을 추진기로 예고하는 등 보란듯이 강공을 날린 것이다.

이에 맞서 보수야합으로 규정된 통합반대파는 '2·4전대'를 확정지은 지난 12일 당무위 결정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는 한편 마지막 카드로 이른바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후 2차회의에서 전대 의장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당헌·당규를 위반했을 경우 전대 회의를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당무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전대 의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이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전대 공고 또는 전대 개최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전대 개최시 필리버스터 허용 등을 통해 합당 안건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준위원장인 김중호 의원은 이날 광주 일보와 통화에서 “전대가 파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전준위는 또 전대 투표권을 가진 대표단원 중 소집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사임 의사를 밝힌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당규를 정비해달라고 당무위에 요청했다. '대표단원 2분의 1'로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이번 전대에서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표단원에서 허수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당 대표단원은 1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전준위 의결 직후 이에 호응하듯 당무위 의장을 맡은 안철수 대표는 15일 오후 3시 당사에서 당무위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내 반발에도 통합파 측이 합당을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자 통합반대파는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양당 합당을 결정짓는 2·4전대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저지를 계획하는 한편 개혁신당 창당의 길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나섰다.

통합반대파 모인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를 더 이상 당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재창당하는 길과 함께 새로운 개혁신당의 길을 준비해나가기 위해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안 대표가 더 이상 '새정치의 아이콘'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일원



“이 당무위 불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장성숙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또 “지난 12일 기습 개최된 당무위는 불법으로, 당무위 결의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지적하며 전대 소집과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당무위를 소집했고, 이렇게 열린 당무위에서

임시전대 소집공고 일시까지 정함으로써 당헌을 어기고 전당대회 의장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안 대표의 쿠데타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 전대'를 저지·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준위는 이번 전대를 서울 한 곳이 아닌 전국 권역별로 동시에 열어 온라인투표 없이 100% 현장 투표로 치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양당 합당이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전대 방식 등 전대 세

척 결정을 두고 통합 찬반으로 갈린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지만 전대 방식 등 전대 관련 사항 전반을 결정하는 전준위가 위원장을 비롯 친(親)안철수계 인사로 구성돼 통합반대파의 실력 저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논의 본격화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혁위)가 이번 주 법원·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끝난 사법개혁위는 이번 주부터 사법개혁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14일 청와대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위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위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로 나뉘어 있다. 최대 쟁점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 신설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검찰의 정

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 신설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수처법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입법권까지 부여받은 사법개혁위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해 다시 고삐를 바짝 쥘 태세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와 비교하면 여야 대립이 덜한 사안이다. 수사권 조

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다룰 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의 수사력 상황 등 경찰 내부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수사권 이전 정도, 영장청구권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충돌 지점이 생길 여지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법개혁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할 사람이 없어 논의가 잘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사안별로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어 오히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권역별 최고위 폐지

지도부 교체 빈번·자리 나눠 먹기 논란 2년만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최고위원회 폐지 문제를 오는 17일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권역별 최고위원회 폐지는 추미에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당 혁신기구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내놓은 혁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민주당의 권역별 최고위원회는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에서 1명씩 뽑히는 데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선출된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주의 청산을 목표로 전당대회 득표 순위에 따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종래 방식 대신 권역별 시·도당위원장을 지도부에 임명시키는 혁신안을 만든 결과였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문제와 더불어 당내에 선 '자리 나눠 먹기' 등의 비판이 있었다. 정발위는 이에 권역별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과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는 안을 내놨다.

권역별 최고위원회를 놓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한 최고위원은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는 전국적 스타를 뽑는 데 한계가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주의 청산을 목표로 전당대회 득표 순위에 따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종래 방식 대신 권역별 시·도당위원장을 지도부에 임명시키는 혁신안을 만든 결과였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문제와 더불어 당내에 선 '자리 나눠 먹기' 등의 비판이 있었다. 정발위는 이에 권역별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과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는 안을 내놨다.

한 최고위원은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는 전국적 스타를 뽑는 데 한계가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주의 청산을 목표로 전당대회 득표 순위에 따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종래 방식 대신 권역별 시·도당위원장을 지도부에 임명시키는 혁신안을 만든 결과였다. 제도가 시행된

與 지방선거 인재영입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준비를 위해 인재 영입·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출마희망자가 넘치고 있지만, 지방선거와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기구는 기존의 인재영입위원회로, 외부 인사 영입은 물론 내부의 우수 인재도 찾겠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인재영입위'가 아닌 '인재발굴위'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영입 또는 발굴한 인재에 대해 전략공천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는 권역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돼 있고, 기초단체장 이하의 원천 금지돼 있는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16(화)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 형 일 : 2018. 1.23(화)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① 원서접수 : 2018. 1.26(금) ~ 2.2(금)
-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6(화)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8. 2.6(화) 오후 2:4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2018. 2.6(화) 오후 2:4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임학원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